

## 나주 3건 '음성'... AI 한숨 돌렸다

### 방역당국 정밀검사 '대장균증' 판정 100만 마리 이상 살처분 면해 안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 여부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던 나주 산포·공산·세지면 등 3개 지역의 오리 집단폐사 원인이 AI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한숨을 돌리게 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나주지역은 450개 농가가 닭·오리 680만 마리(전남의 22%)를 기르는 전남지역 가금류 최대 사육지역에서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날 경우 100여만 마리의 살처분까지 우려되

는 상황이었다.  
닭·오리 최대 사육지에서 AI 음성 판정이 나오자 방역당국과 나주지역 농가들은 위기를 넘겼다. 안도감과 함께 나머지 정밀검사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했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0일 발생한 이들 세 지역의 오리 집단폐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집단병이 대장균증으로 밝혀져 AI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계지역(10km) 밖인 나주 산포면의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방역대를 새롭게 설정해 집단 살처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농가들이 크게 긴장했으나 이번엔 AI 음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AI가 확진된 영암·신북·나주 반남으로부터 경계지역(10km) 안에 있는 나주 공산·세지면의 경우 이동 제한이 풀리지는 않지만 검사 후에 반출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계 지역 밖의 산포면은 곧바로 이동 제한이 해제돼 자유로운 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영암 6곳, 나주 4곳, 무안 2

곳 등 전남도내 18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아직 남아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무안과 영암 등 7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오리고기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는 "AI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는 매출이 평소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조만간 90%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AI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농가나 제조업체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고 안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살처분 동원 군인 AI 의심 격리

군당국은 21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순창지역의 살처분을 지원했던 조도(22) 상병이 고열 증상을 보임에 따라 촉각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순

창지역에서 AI에 걸린 닭과 오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지원했던 특공 여단 소속 조 상병은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후 20일부터 고열 증상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후 일본 황궁을 예방, 현관까지 영접 나온 이키히토 일왕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지방 없는 나라는 없다 ②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하라

### 이전약속 깨면 국가신뢰 깨진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입장과 관련해 지역민들은 "공동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 담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민들은 특히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17개 공기업이 이전되지 못한다면 나주혁신도시는 '공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민영화 불가피할 경우 '선(先) 이전 후(後) 민영화',

최근 전남발전 연구원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 극대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교육·의료, 문화 시설 확충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략산업 극대화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업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 철도, 간선도로, 진입도로 건설 등 주거·교육·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종합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17개 이전 기관을 축으로 추진하게 될 에너지, 정보·통신, 농생명, 문화산업 등 특화산업의 지원책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효과가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광역적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데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재검토 땀 평범한 '산업단지' 전략 한전 등 민영화 논의도 옮긴 뒤 해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정이나 변질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조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한전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전 조건부 민영화' 등 대안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무조건적인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방 이전을 꺼리는 공기업들에게는 이전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효과가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인구 유입책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韓·日정상 "성숙한 동반자 관계 확대"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東京)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관 신시대 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4면>  
또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와 EPA(경제연계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 개최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에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일본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고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교류증

대 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담당 정부 기관간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향후 3년간 새로 1천 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 시작기로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 부품산업분야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회담 뒤 일본총리 관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서블외교 복원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있는 경제 협력강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 ▲지구온난화, 중

국의 황사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환경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정상외교 활성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 2008년 5월 4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 5월 2일(금) 오후 5시까지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222-8111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 참가비 :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 상 :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협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